

경교장과 경무대(1)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1)-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 해방 전후의 국제환경

- 1945년 8.15 일본의 패망->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 vs 소련의 경쟁(동서 냉전=사회주의체제 VS 자본주의체제)
 - 미군의 일본 점령(~1952년까지 6년반, 연합군 최고사령부 주둔, 간접통치방식)
 - 미군의 남한 진주와 직접 군정 실시(1945~1948년 약3년간)
 - 1949년 중국은 국민당 VS 공산당 내전에서 공산당 승리,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대만(중화민국)
- ⇒ 남북 분단 정부 수립, 1950년 6.25 전쟁 발발, 남북한 분단체제 형성과 통일문제에서 국제환경의 영향력(외인론 VS 내인론)
- ⇒ 미, 일, 중, 소(러)의 영향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미일동맹의 진화

(2024.4.10.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 Joe Biden과 기시다(岸田文雄) 총리 간 정상회담
 -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 규정. 안보, 경제, 우주 등 전방위적 협력 약속.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층적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국
 -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계획책정 강화. 양국 각각의 지휘·통제구조 개선 = 주일미군(약 54,000명) 사령부와 일본 행정 협정 상 지휘·통제 권한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19시간 시차 문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 틀(AUKUS)의 일본 참여 검토 => 일본의 방위비 증액, 한국에 시사점...
- * 주한미군 현재 28,500명 < 1955년 85,500명

1. 해방 전후의 국제환경

- 한반도 문제와 열강의 동향
 -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미, 영, 중;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in due course' 한국 '독립'을 결정한 최초의 선언, 장제스의 역할)
 - 1937년 중일전쟁->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주장
 -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
 - >1941년 하와이 진주만 습격, **태평양전쟁** 시작
 - >미국 미드웨이 해전(vs일본), 소련 스탈린그라드 전투(vs독일)
승리로 연합국이 세계 제2차대전 승리



일본의 대동아공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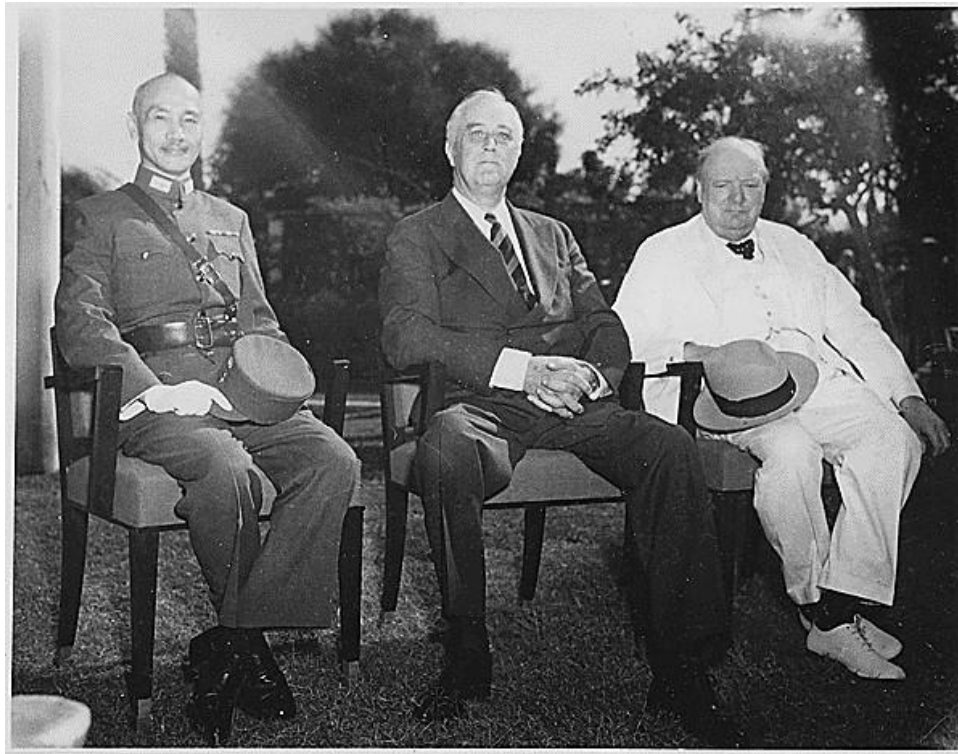
대동(大東)합방론(-> 대동아공영론)

- 인종주의(러일전쟁=황백인종간의 대결)
- 일본맹주론
-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로서 '동양(東洋 Orient)'이란 용어 등장
- 서양(Occident)의 반대 개념이나, 원래 유럽인에게 동양Orient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
- 근대 일본이 새로 창출해낸 동양 개념은 동, 서가 만난 가운데 서양 문명 수용에서 가장 앞선 일본이 만들어 낸 용어(동양의 맹주 일본)

1. 해방 전후의 국제환경

- > 1945년 2월, 얄타 회담(미, 영, 소; 미국 F.루즈벨트 대통령, 연합국에 의한 20-30년간 신탁통치론 주장)
- >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미, 영, 중; 카이로 선언 이행 결의, 일본의 항복 요구, 독일은 5월 8일 종전)
-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ex: 영화 오픈하이머)
- >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 8월 14일, 38도선 획정 연합국 일반명령 제1호. 미, 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안
- > 1945년 8월 9일 소련군 북한 진주, 9월 8일 미군 인천 상륙

카이로회담과 알타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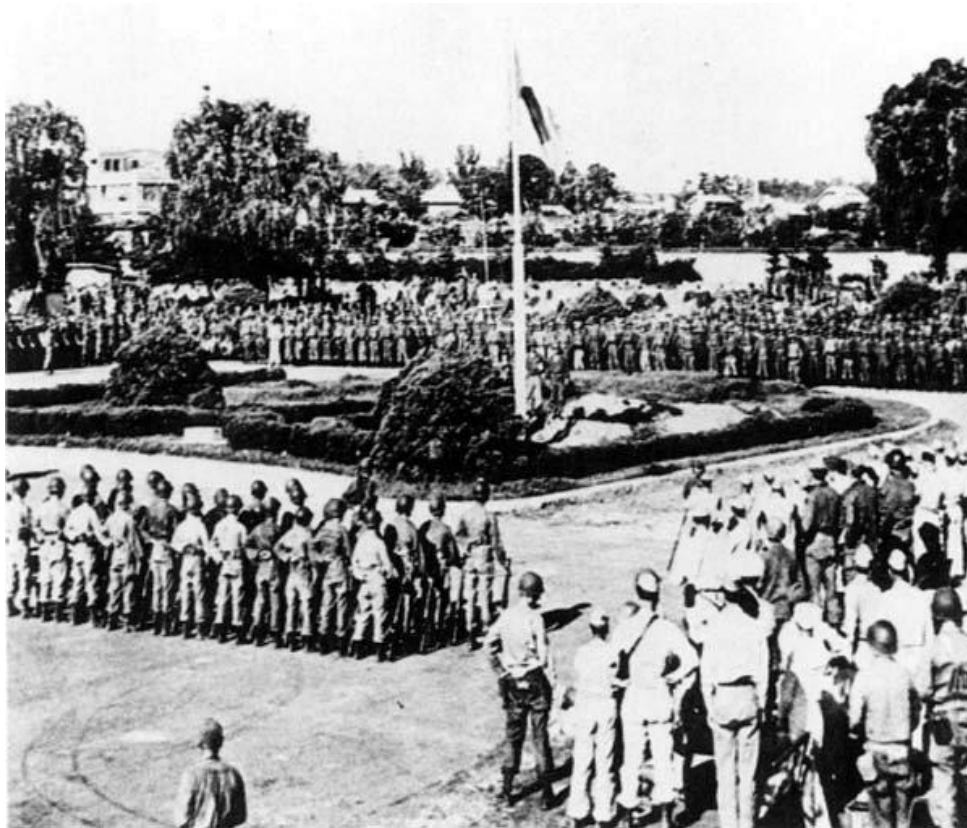


2. 미군정의 수립과 역할

- 미 태평양방면군 제24군단장 **존 하지**
- 조선총독부 아베 총독과 하지 사령관 체결, 일본의 항복 조인식(**일장기->성조기**)
- 3년간의 미군정 시작(by 오키나와에서 단3일간 교육받은 100여명. 조선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 미 태평양방면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문
“**점령군**에 반항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
- **아놀드** 소장의 군정장관 취임(9월 12일)
- > 38도선 이남의 모든 치안 행정권 장악(각 국장에 미군 장교 임명) “**유일무이한 통치권력은 미군정뿐**”



2. 미 군정의 수립과 역할



내려가는 일장기



2. 미 군정의 수립과 역할

<표> 1946년 현재 일제시대 경찰 출신자

직위	1946년 총수	식민경찰 출신	비율(%)
치안감	1	1	100
청 장	8	5	63
국 장	10	8	80
총 경	30	25	83
경 감	139	104	75
경 위	969	806	83

출처: 1946년 11월 1일에 윌리엄 맥린이 한미회의에서 행한 보고 XXIV Corps Historical File 참조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222쪽에서 재인용).



2. 미 군정의 수립과 역할

- 식민지 조선 거류 일본인의 귀환=세화회(SEWAKAI=Japanese Relief Society, 1945.8~1948.7)
- 해방 당시 재조선 일본인 120만명(군인 32만명+민간인 80만명 이상=남한지역 596,454명. 북한지역 322,585명)

Ex: 요꼬이야기

- 아시아 태평양지역 일본인 귀환자 총인원 650만(육해군 350만)
-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vs 일본인 귀환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
- 해방 후 조선인들의 일본인 배척

3. 국내 정치세력의 활동

1)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위원장 **여운형**)

- 8월 15일 조선총독부 엔도 정무총감과 회동, 치안 유지 및 정치범 석방 등 약속
- 좌우 정치세력 포괄
- 145개 전국 지방지부 결성
- 미군 진주 직전 우익계 탈퇴, 좌우 갈등

9월 6일 조선공산당의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선포



3. 국내 정치세력의 활동

2) 미군정의 좌익 견제와 우익 육성정책

- 9월 16일 우익계의 **한민당** 결성

송진우, 김성수 등 일제하 지주계급 출신 우익계 주도
다수의 친일파 참여로 친일파 정당 비난

미 군정 고문, 지방관리, 치안경찰 등 요직 독점

- 10월 16일 **이승만**의 귀국, 맥아더와 친분 전용 비행기 귀국 **반공, 반소, 친미** 성향

-> 독립촉성중앙협회(**독촉**) 결성



3. 국내 정치세력의 활동



이승만과 맥아더



3. 국내 정치세력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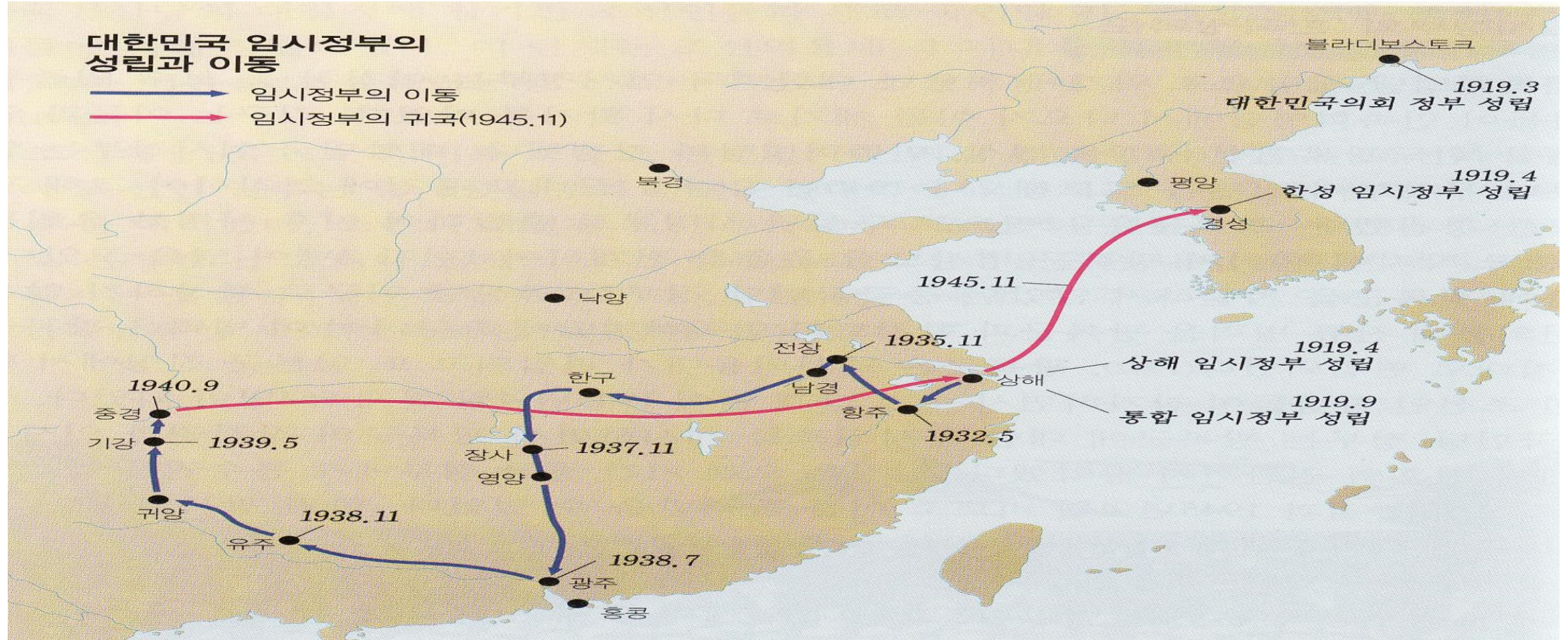
3) 김구와 임정세력의 귀국(1945년 11월 23일)

- 미 군정의 요구 "**정부를** 참칭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말라"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
- 임정의 정통성(법통성) 강조. 한국독립당(한독당) 조직
-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영·미·소·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한국·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임시정부 광복군의 참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경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조소앙)

-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적의 일체 통치 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나라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 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및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적이 침략 점령 혹 시설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역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백범 김구



백범 김구와 경교장(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 경교장-일제강점기 금광업자 최창학의 별장. 해방 이후 백범 김구 거주(1945.11~1949.6.26). 중화민국 대사관저, 강북 삼성병원 등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국가 사적 465호로 지정되어, 복원 공개.



3. 국내 정치세력의 활동

4) 조선공산당

- 9월 11일, 좌익계 조선공산당 결성. 박헌영 중심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전국적 대중조직
- 11월 12일, 중도 성향의 좌파 정당 조선인민당 결성
건준위원장 여운형 대중적 인기(1947.7.19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됨)

⇒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으로 합당

(북한지역)

- 1945.8.8 소련, 대일 선전포고. 8월말 북한전역 장악-> 사회주의체제 지원
- 1945년 9월 김일성 귀국
- 조만식 중심 기독교계 우익 정당(조선민주당)



3. 국내 정치세력의 활동



경교장과 경무대(2)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2)-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과 미소공위

1) 삼상회의의 결정과 미소의 구상

- 1945년 12월 미, 영, 소 3개국 외상 회의

- 미국의 **신탁통치안** vs 소련의 **임시정부수립안**

=> 미소공동위원회와 여러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에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위와 임시정부 협의 하에 미, 영, 중, 소 4개국 5년 이내 신탁통치안 결의(한국인의 주체성 배제, 연합국의 국제협조주의)

-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신탁통치안' 보도

- 한민당, 김구와 임정, 대중 반탁 vs 좌익계 반탁->찬탁



미소 공동위원회



1.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미소공위

2) 반탁 vs 찬탁 논쟁

- 김구: 반탁운동 선언(12월 28일)과 임정추대 운동
미군정에 대한 불복종 운동 시도(12월 31일)
 - 이승만과 한민당: 반소반공노선 강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구
극우세력에 의한 송진우 피살(12월 30일)
 - 좌익세력: 삼상회의 결정 총체적 지지 선언,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 => 찬,반탁 논쟁=좌,우익 대립
반탁=반소=반공=친미=애국
친일파-> 우익 정치인 변신



1.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미소공위

3) 미소공위의 전개와 결렬

-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위
- 극심한 좌우 갈등과 대립
- > 좌우합작노선(여운형, 김규식)의 등장
- 극좌, 극우세력의 강경론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 '남한단독정부론'
좌익, 한독당의 반대 성명



1.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미소공위

- 미군정의 좌익 탄압-> 박헌영 체포령과 월북
- 1946년 9월, 좌익계 주도 총파업(25만명 참여)
- > 10월, 대구사건
- 1946년 12월,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발족
미군정 지명자+극우성향/ 좌익 참여 거부
-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위 개최
- > 7월 19일, 좌우합작 지도자 여운형 피살.
좌우갈등 격화



2. 남북 분단정부의 수립

1)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 미소공위 실패, 미소 타협의 결렬
-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반공)

-> 냉전의 시작

-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소련불참)
유엔 감시하 남북 총선거안 가결
유엔 8개국 대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구성
- 12월 초, 우익계 장덕수 암살 사건
- 좌익계 유엔 결정 반대



2. 남북 분단정부의 수립

- 12월 20일, 중간파 민족주의자의 민족자주연맹 결성(김규식)

⇒ 남북협상론 제기

- 1948년 1월 초, 유엔한국위원단 입국, 선거계획

=> 김구, 이승만 한민당과 결별,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방안 제시.

=> 남북4김 요인회담 제안

(김구, 김규식 vs 김일성, 김두봉)

- 1948년 2월 26일, 유엔 '유엔 감시하 선거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 결정(미군정 관할, 남한 단독선거 의미)



2. 남북 분단정부의 수립

2) 남북협상의 길

- 북한의 평양회의의 제안
- 1948년 4월 남측 좌파, 중간파, 임정세력의 북행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 참여 '남북 제정당 사회 단체 연석회의' 총 695명 중 남측 240명 참여

- 단독선거 반대, 미소 양군 철수 요구
- 미군정과 한민당 세력의 반대



2. 남북 분단정부의 수립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 1948년 5월 10일, 미군정 책임하 제헌의원 총선거
(200개 선거구 중 제주 2개 제외)
- 이승만 계열 29%, 한민당 14.5%, 무소속(김구, 김규식 지지) 42.5%
이청천 계열 6%, 이범석 계열 3%
- 5월 31일 제헌의원 '**대한민국**' 국호 결정, **대통령 중심제** 선택
- 7월 17일 제헌헌법(자유민주주의) 공포
-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국회, **간접선거**)
- 8월 15일 해방 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



초대 대통령 관저 경무대(현재 청와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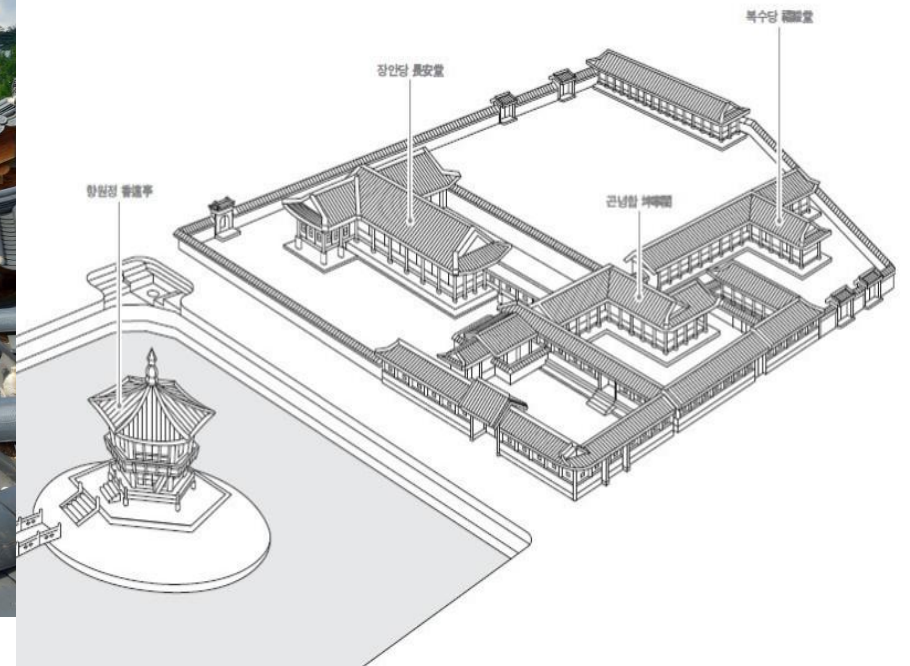
초대 대통령 관저 경무대(景武臺)

- 경무대의 역사

- 1873년 고종이 경복궁 가장 북쪽지역에 건청궁 건립
- 건청궁은 근대 개화정책의 추진처(1887년 최초로 전기 점등/미국 에디슨 전기회사)
- 건청궁의 후원이었던 경무대
용문당, 용무당. 과거 시험과 군대 사열 행사
- 1895년 을미사변의 현장으로서, 1909년 일제에 의해 철거됨
- 2004~2006년 복원



건청궁 과거와 현재



초대 대통령 관저 경무대의 역사

-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 후, 191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복궁 훼손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 1926년 광화문 안쪽에 조선총독부 청사 완공
- 1939년 경무대 지역에 조선총독 관저 건립
- > 1945년 해방후 미군정청 관사
-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대통령 관사 겸 집무실
- > 1960년 4.19 이후 이승만 대통령 하야
- >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
- >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본관 및 관저 신축과 함께 기존의 경무대 건물 철거

제헌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
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
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
를 완수케 한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유지를 위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
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
정한다.



제헌헌법

<제1장 총강>

- 제1조 대한민국은 □□□□□이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와 그 □□□□로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남북분단체제와 독도문제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 북한정부의 수립과정

- 1946년 3월 토지개혁(무상몰수,무상분배)
- 일본 혹은 친일파 소유 주요산업 국유화
-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 1947년 말 헌법 제정 준비
- 1948년 6월말 제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평양 개최(정권 수립의 명분 확보 목적)
- 1948년 9월 2일, 헌법 제정.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홍명희, 김책 선출
- >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2. UN이 인정한 합법정부 논란

- 원문)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 which was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2. UN이 인정한 합법정부 논란

- “번역문)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 (KOREA) 인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 이 정부가 한국의 그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한국의 그 지역에서의 단지 그와 같은 정보임을 선언한다.



3. 전후 일본과 도쿄재판

- 일본 패전(1945.9.2 공식 항복문서 서명) 후, 연합국은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 총리 도조 히데키 등 체포령, 1000여명의 전범 용의자 체포
-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쿄 재판) 설립 공포
- 1946년 4월, 1928~1945년 일본의 침략전쟁 A급 전범에 대해 "침략 전쟁 공동 모의죄"로 28명 기소
- 1948년 11월, 25명 유죄판결. 도조 히데키 등 7명의 군인과 정치가 사형 판결, 12월 처형

<= 일본 우익의 인식: 패자에 대한 승자의 일방적 보복 재판.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도 전에 A급 전범 사형집행은 적의 손에 살해당한 전쟁희생자라는 주장(야스쿠니신사)



야스쿠니(靖國) 신사와 쇼와(히로히토) 천황



3. 전후 일본과 도쿄재판

- 패전국의 영토 할양이나 배상금 지불 외에 지도자 '**개인**'이 '**전쟁 범죄**'로 심판 받은 전례가 없다는 일본측 주장
- 최고 책임자였던 일본 **천황**(히로히토)은 전쟁 책임에서 제외
 - 소련과 호주는 천황 기소를 주장 BUT 피고인 제외, 증인 제외
 -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간접통치방식=일본 국민의 구심점인 천황을 통해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
 -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심화와 공산주의 봉쇄정책으로 전환=사회주의체제 확산에 대비하여 일본의 경제재건 및 부흥정책으로 급반전(+일본 정치지도부의 적극적인 로비)



4.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문제

- 샌프란시스코 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미국을 비롯한 세계2차 대전 전승국(연합국)의 전후 일본 처리 방안. 미국과 영국이 주도. 중국 제외. 인도, 미얀마, 유고는 불참. 소련, 폴란드, 체코는 참가했으나 서명하지 않음(총 49개국 서명-일본 요시다 시게루 수상)
- 1951년 9월 8일 조인, 1952년 4월 8일 발효
 - 한반도 독립 승인, 타이완과 사할린 남부 포기, 남태평양 제도에 대한 미국의 신탁통치,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시정권
 - 일본의 채무 이행 능력 한계, 일본 부흥을 위한 배려로 청구권 포기(유례를 찾기 힘든 “관대한” 조약)



4.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문제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 인정,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 포기 규정. 독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일본 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훨씬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이 아님
- 1947년 3월 19일 조약 초안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 (Riancourt Rocks)를 포함하여 한국과 모든 한국 연안의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포기 " 라고 규정(명시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킴)



4.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문제

- 1949년 12월 8일 조약안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 <= 미국 정치고문 시볼트 W.J. Sebald의 권고
- 12월 19일 조약안, 다시 한국 영토
- 12월 29일 및 1950년 1월 3일 조약안, 다시 일본 영토
- 1950년 8월, 9월~1951년 3월 조약안에서는 독도 규정 생략
- 1951년 4월 7일 조약안, 다시 일본 영토
- 1951년 5월 3일~9월 조약안, 독도 규정 다시 생략(by 덜레스 J. Dulles)
- <= **한국은 한국전쟁 진행중,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시**
-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평화선 안에 규정 <= 일본의 항의서한

